

여야, ‘용적률 0.1배’ 이견… 부동산 공급법 후속법안 무산

본회의서 비쟁점법안 17건 처리
공급 확대 공감, 방법론은 입장차
국토부 장관 교체 등 변수 전망

여야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용산공원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 등 부동산 공급 후속조치 법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하고 본회의에서 비쟁점법안만 처리했다. 특히 도심 내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완화와 관련, 용적률 상향 폭과 소형주택 건설 조건에서 여야 간 입장 차가 극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을 1년 연장하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비쟁점법안 17건을 처리했다.

이재명 정부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기대를 모았던 부동산 관련 법안은 여야가 논의를 지속했으나 타결되지 못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용산공원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도시재정비촉진법(도촉법) 등은 오늘(본회의에)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며 “이 부분은 사실상 국토교통부



3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대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처리되고 있다. /뉴시스

장관과 서울시장이 아직 협상을 진행 중인 만큼 내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20일, 26일 본회의에서도 같은 이유로 상정이 연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임으로 홍기선 국토부 제2관을 지명한 가운데, 실질적인 부동산 공급 법안 처리는 홍 후보자의 내각 입성 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나

온다.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은 용산 미군기지 주변 산재부지를 활용하는 캠프김(전 주한미군 주둔지) 등 복합시설조정지구에 공원·녹지 기준 대신 유연한 설계 기준을 적용해 서울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은 도심 내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예

방 및 조정하고 공공 정비사업의 경우 용적률(건물 전체의 연면적 합계)을 완화해 도심 내 추가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공원 내 녹지 기능을 상실한 곳은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를 위해 대규모 녹지를 남겨둬야 하며, 여당이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 등 정비사업 촉진법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를 제안해 협상이 진전되는 듯했으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용적률 상향 폭을 높이라며 역(逆)제안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야당 간사인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에게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에서 진행되는 민간 정비사업에 용적률을 1.2배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민간 정비사업에도 용적률을 1.3배로 완화하자는 입장이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대지 면적 대비 건물의 총 바닥 면적이 넓어져 층수가 많아진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에서 민주당의 용적률 규제 완화 제안을 두고 “민주당은 완화되는 용적률에는 전 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만 건설할 수 있도록 또다시 조건을 달았다”며 “바로 이래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공공 정비사업은 1.3배까지 풀어주면서 민간은 왜 1.2배인가”라며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겠다면서 왜 또 주택 규모까지 제한하는가. 이럴 거면 차라리 임대주택을 지을 때만 용적률을 완화하겠다고 하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업성 부족 때문이다. 공사비는 치솟고 각종 규제와 부담은 그대로”라며 “그러다 보니 사업성이 나오지 않고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고 싶어도 사업이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용적률이라도 과감하게 풀어서 사업성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국힘, 선관위 개혁안 당론 채택 ‘보류’

선관위 개혁 81개 법안 검토
의원 의견 추가 수렴하기로

국민의힘이 3일 사전투표제 폐지와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개편 등을 포함한 선관위 개혁 법안을 의원들에게 보고했지만, 당론 채택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당은 일부 법안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논의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3일) 정책의총은 지난 6·3 지방선거 진상 규명 및 선관위 개혁에 관한 특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발의했던 조직법, 사전투표를 없애는 법안 등



정정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협이된 내용을 보고하는 자리였다”며 “(그렇지만) 아직 최종 정리가 되지 않아서 의견을 묻고 진행할 예정이다. 그래서 오늘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투표용지에 대한 관리 방법 및 선관위 조직에 대한 법을 전면 개정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나온 것만 해서 81개다. 더 추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는 국민 참정권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투표용지 부족 사태부터 시작해, 투표 관리뿐 아니라 수개표 문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투표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 모든 방안과 방법들을 전문가들과 모여 토론회도 하면서 법안 발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며 “전체를 다양하게 손보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개혁안 세부 내용을 담은

자료를 의원들에게 미리 전달하지 않은 채 특위의 설명을 토대로 당내 의견을 취합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법안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 원내대변인은 “어떤 내용을 (미리 공유)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의원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고 계속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23일 박대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선거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이른바 ‘국민참정권 수호 법안’ 마련을 추진해 왔다.

특위는 ▲사전투표제 폐지 ▲각급 선관위 통폐합 ▲선관위와 분리된 독립 감찰 기구인 감사위원회 설치 ▲선관위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신설 등을 검토해 왔다. /박경수 기자 gws0325@

李 대통령 잇단 경찰 부실 논란 “치안 전면 재점검”

이재명 대통령(사진)은 3일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등과 관련해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치안에는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최근 연이어 벌어지는 사건은 우리 치안에 적지 않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등이 연달아 불거지며 경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10월 중 대법최소사청(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하면서 수사·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므로, 이로 인한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다수의 경찰관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도, 아주 극히 소수의 일탈만으로도 전체 체계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며 “비단 실종 사건뿐 아니라 모든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에 기존의 관행과 시스템이 잘못된 게 없는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하겠다”고 지시했다.

이어 “내부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와 피해자 관점에서 객관적 관찰자 시점에서 무엇이 부족했고 또 뭘 보완해야 할지를 치밀하게 살펴봐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한병도 “중부세 재검토는 국민 경청”

〈민주당 원내대표〉

중부세 정책 수정 논란에 반박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중부세) 기본 공제를 현행인 12억원으로 유지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29일만의 유턴’이라고 비판하자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한 것이 어떻게 조변석개이고 백기투항인지 국민의힘에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국민을 무시하고 한 번 정한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였을지 몰라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예산과 세제는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

는 국가의 핵심 수단”이라며 “이번 예산안은 우리 경제에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그 성과가 국민 모두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생 회복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라며 “경제 회복의 온기가 민생 곳곳에 퍼지도록 필요한 재정의 역할도 강화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IS 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셨다”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불가피하게 실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의 사정을 폭넓게 인정하고 비거주 1주택자의 중부세 공제 축소와 세부담 상한 확대 재검토 관련 토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野,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국조 추진

“정책 결정 과정·책임 소재 밝힐 것”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부위원회 위원들이 3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을 두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둘러싼 정책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서일준 의원 등 정부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로 이번 사태를 끝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들은 누가 이 정책을 만들었는지, 누가 도입을 밀어붙였는지, 충분한 위험성 검토와 투자자 보호 대책은 있었는지 그리고 청와대와 금융당국 사이에 어떤 보고와 지시가 오갔는지 밝혀야 한다고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로 개인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이 약 54조원에 달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 정도의 국민 피해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시장 상황이나 투자자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고위험 상품을 어떤 검토와 절차를 거쳐 도입했는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용범 전 정책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아들이 특정 자산운용사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진 점, 그리고 김 전 정책실장이 특정 금융회사 회장과 회동을 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관련한 정책라인에 있었던 만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소지는 없었는지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예진 기자 syj@

/서예진 기자